의원들 지각에 겉핥기식 질의 맥빠졌다

■ 국감현장

행안위- 전남도

"적자 F1대회 계속 치를 건가" 질책

박지사 "영암호 통선문 예산 도와달라"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F1(포뮬러원) 대회와 4대강사업, 여수엑스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으나 대부분 '재탕' 수준이어서 이렇다할 긴장감 없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주어진 시간(7분) 동안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의 '겉핥기식' 질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쳤고 고질병인 의원들의 지각과 자리 이동도 여전했다.

◇ F1(포뮬러원) 대회, 적자 대책 있느냐=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F1 대회와 관련, "F1대회가 전남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만 흑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면 굳이 계속 대회를 치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진 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규모 적자가 나는 행사라도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사라면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고 문학진 민주당 의원도 "(F1대회)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면 쇼킹하다","F1 대회의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F1 경주장 인수에만 들어가는 198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전남도민 1인당 채무액이 73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데 꼭 필요한 데 썼다고 하더라도 한 번 늘어난 지방채를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F1대회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경주장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면 재정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영암호 통선문, 예산 반영 안돼=박 지사는 이날 "영산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려면 과거 황포돛배가 다니는 모습을 그려내야 하지만 농업용이 아닌, 관광용이라는 이유로 영암호에 통선문을 설치하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호남의 젖줄로, 총 사업비 3조가 들어가는 영산강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영암호 통선문 설치 사업 진척 상황을 물은데 대한 답변이었다.

영암호 통선문 사업은 영산강 유역에 중·소형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영암호에 폭 20m의 통선문(通船門·방조제 등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해에서 1000t급 여객선과 500t급 관광유람선 등이 영암호로 들어와 영산호를 잇는 연락수로(폭 140m)를 거쳐 죽산보를 지나 영산강 상류 67㎞ 지점 광주시 승촌보(洑·댐)까지 운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전남도가 요청한 700억의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반영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누락됐다. 이 때문에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뱃길을 통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를 꾀하려했던 전남도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영산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탓에 예산이 삭감됐으며 당차원의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4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실국장들이 성실답변을 약속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세미나 4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무등산 자연·경관의 재발견'이란 주제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전남대 박승필 교수는 무등산 주상절리대만의 특징을 부각시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교 경비원 월급 70~80만원 너무 적다"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광주시의회는 4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방과 후 학교 사업과 학교 경비용역 처우, 교육비리, 비효율적 예산집행 등에 대해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화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조호권(민주·북구 5)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작성한 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만족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68.9점, 지난 6월 기준 참여학생 비율도 62.1%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해 지난 2008년 447명이었던 다문화가정 학생이 올해 864명으로 93.3% 급증했지만, 시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정책이 부족하다"며 "수요자의 특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문화 교육정책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인화(민주·북구 4) 시의원은 "2006년 이후 예산 대비 집행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불용액이 늘고 있다"라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문제와 과다한 불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홍(민주·동구 2) 시의원은 "시 교육청은 그동안 연이은 각종 공사·인사 비리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려 왔다"라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1년이 되어가는 만큼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교육행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방(민주·북구 6) 시의원은 "광주 276개 학교에서 경비용역 근무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근무시간에 비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0~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라며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우(민주·동구 1) 의원은 "인화학교 사건이 6년 전에 발생한데다 사실상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법석을 떠는 것이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라고 지적한 뒤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양위-여수광양항만公

"1조400억 금융부채 해결책 뭔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4일 주요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설립 전부터 제기돼온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과다한 부채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새롭게 출발하였고 선박 입출항 척수와 취급물동량이 부산항만공사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이자 여수항과 광양항 2개 항만을 관리하는 최초의 항만공사"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부산항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등 총 28선석 개발 사업에 투입한 재원을 외부차입금으로 충당했고 2004년도 이후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재산 이관으로 따라 항만수입이 대폭 감소해 차입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원인으로 1조400억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지고 있다"고 재무건전성 문제를 들춰냈다.

그는 이어 "부채해소를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5개 출자회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출자지분 매각뿐 아니라 물동량 증가 등을 통한 항만운영수입을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중장기적으로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 설립됐지만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자산과 부채(지난해말 기준 1조 467억원)를 모두 승계했다"며 "▲정부지원금 3300억원 ▲부산·인천 항만공사 자산 이관대 671억 ▲자산매각대금 160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신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책임질 채무액은 무려 489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광양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선박입 출항료 ▲화물입 출항료 ▲접안료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부채 상환 등을 이유로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또 항만공사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유지·보수가 더디고, 투자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